

# 코로나19 대유행과 격동하는 지구촌의 노동조건

이상준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가치사슬 재조정과 맞물려 향후 비가역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7월호 기획특집에서는 생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Eurofound)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노동생활 2020』 보고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EU 회원 27개국과 노르웨이, 영국을 포함한 총 29개 유럽지역 국가를 포괄하는 해당 보고서는 2020년 노동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추적한 개별 국가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와 노사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에 대한 개별 국가 보고서를 번역하여 신는다.

첫째, 프랑스에 대한 국가 보고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봉쇄조치를 반복적으로 겪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역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재택근무와 통근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노동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 재택근무, 디지털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은 가속화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는 보류되거나 중단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중단시키지 않고 오히려

려 더 활발히 촉진하였다.

둘째, 영국에 대한 국가 보고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봉쇄조치를 반복적으로 겪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 영국 정부는 고용유지제도, 세금납부유예제도 및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운영하였다. 보건, 철도 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법정상병급여제도 확대,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 등이 가속화되었으며, 고용법 개정은 지연되거나 유예되었다. 영국 또한 프랑스처럼 보건 위기가 단체교섭 등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였다.

셋째, 독일에 대한 국가 보고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봉쇄조치를 반복적으로 겪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 건강 및 안녕 측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 독일 정부는 기업 유동성 긴급 지원, 기초소득보장제도 확대, 한시적인 세법 개정을 통한 재택근무 세금 공제, 노동시간 단축제도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보건 위기는 독일의 산별 단체교섭 등 사회적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노사 등 사회적 주체들은 노동쟁의와 파업보다는 노사공존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종합하면, 이번 7월호 기획특집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노동생활 2020』 보고서를 소개하며 서유럽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자료들은 우리의 정책 대응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지구촌의 노동조건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도 해야 할 것이다. **KLI**